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보 고

2026. 2. 5.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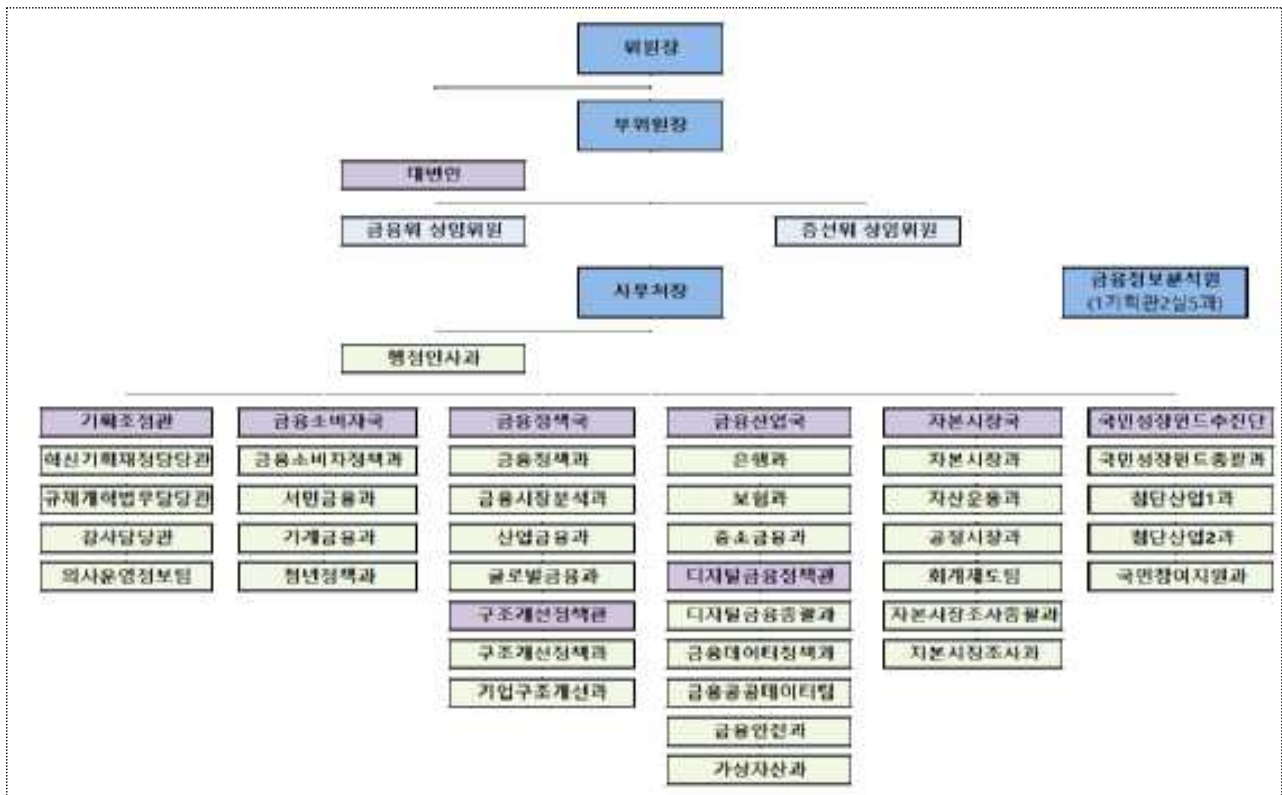
순서

I. 일반 현황	1
II. 2025년 성과 및 평가	2
III. 2026년 업무 추진방향	3
IV.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4
1.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4
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6
3.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8
V. 주요 입법 추진사항	10

I. 일반 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본부) 1관 4국 2정책관 1대변인 1단 30과 / (소속기관) 1기획관 2실 5과



② 인원 현황('26.1월 기준)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계
정원 합계	2	372	8	382
본부	2	301	-	303
금융정보분석원	-	71	8	79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4,183,766	4,651,626	467,860	11.2
사업비	1,640,916	2,106,009	465,093	28.3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	2,498,794	△1,206	△0.05
기본경비	9,639	9,728	89	0.9
인건비	33,211	37,095	3,884	11.7

II. 2025년 성과 및 평가

◆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의 「금융 대전환」 기틀 마련

- (1)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을 위한 금융시스템 혁신 시작
- (2) 민생회복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 과감한 조치 단행
- (3) 금융시장안정과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일관되게 추진

1. [생산적 금융]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을 위한 혁신 시작

- ☐ 미래 성장동력 준비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출범('25.12.10일), 생산적 분야로 금융권 자금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감독·인가 등 개선*

* 비상장주식 투자 RWA 합리화(400%→250%) 등 은행건전성 규제 개선('25.9.19일)
모험자본 25%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25.11.19일) 등

- ☐ 코스피 5,000 달성 등 시장과 투자자의 기대도 긍정적

2. [포용 금융] 민생회복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등 과감한 조치 단행

- ☐ 상환능력을 상실한 국민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심사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출범

* 새도약기금 출범 4개월만에 1.1조원, 약 7만여명 연체채권 1차 소각('25.12.8)

- ☐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을 확대(새출발기금)하고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추진

* 개인 257.2만명, 개인사업자 35.6만명 등 292.8만명에 대해 지원조치 완료

3. [신뢰 금융]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 시장질서 등 확립에도 노력

- ☐ 가계부채 대책(6.27대책 등), 관세위기 대응 등 리스크 관리 철저

-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신설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행 등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유출(징벌적 과징금 등)·보이스 피싱(정보공유 AI플랫폼 등) 등에 대한 제도적 방비 방안 마련

Ⅲ. 2026년 업무 추진방향

◆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금융의 「3대 대전환」 가속화

- 금융이 경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금융 대전환 추진
- 현장에 기반한 금융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조기 창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 ✓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 가속화
- ✓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

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첨단산업 지원 정책금융 선도	· 국민성장펀드 가동 개시 및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 정책금융 공급 효율화
지역·기후·소상공인 지속가능 경제	· 정책금융 지방공급 및 기후금융 단계적 확대 · 지방우대 금융 확대 및 소상공인 금융체계 개편
금융회사 생산적금융 경쟁력 강화	· 정부·금융권 협의체 생산적 금융 강화방안 모색 ·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본시장 활력 연결·확산	· 코스닥 역동성(多産多死)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세제·규제 개선을 통한 우리 자본시장 투자유인 제고

②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금융소외자 금리인하	· 청년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저금리(4.5%) 대출 신설 · 금융배제계층 금리부담 대폭 완화(5~6%)
중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제고	· 정책서민금융 → 은행 대출로의 크레딧 빌드업 · 중금리 대출 등 금융회사 자체 서민금융 강화
연체자 재기 지원	·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 ·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국민 금융역량 제고	· 세대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금융교육 강화

③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흔들림 없는 금융 안정	·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 부동산PF 연착륙 지속 · 선제적 유동성 지원 및 효과적 부실금융회사 정리
자본시장 질서 확립	· 주가조작 예방·감시 체계 강화 및 제재절차 개선 · 자사주·합병·분할상장·공시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	· 해킹사고 예방 훈련 및 과징금 강화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초국경범죄·자금세탁 근절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 치매보험 활성화, 실손보험 개편 · AI Agent 도입

IV.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1.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 ☐ '26년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공급 개시(지역에 40% 이상 공급 목표)
 - * 지방 4건을 포함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 선정 → 1.29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승인
- 금융·산업·시장의 최고 전문가 거버넌스가 투자결정 등을 지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 (6월경)
- ☐ 자금공급이 절실한 첨단·유망산업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고, 장기·중복 보증의 축소 등 정책금융 효율화 추진
 - * 5대분야(첨단산업 육성, 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재편, 유니콘 육성, 경영애로 해소) 중점 공급
- ☐ 금융업 자체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AI전환(AX)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 마련

2. 지역, 기후, 소상공인 등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 ☐ 지역 정책금융을 '25년 40%·年100조원에서 '28년 45%·年12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민간금융 확대*도 유도
 - *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개선(예: 지방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및 신규 지역상품 출시 유도 등을 통해 30%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지역금융 지속 확대
- 북극항로 개척 및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추진
- ☐ 탄소감축 등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로드맵 마련 및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개선
 - * 현행 年 60조원 수준인 정책 기후금융 공급을 5년에 걸쳐 年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및 은행권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개선

3. 정부와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여 **금융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색

* 민/관 실무 TF를 통해 전 업권 규제합리화 등 병행 추진

-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실질적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중기·벤처 지원역량 강화

* 현행 대비 '28말기준 약 26.7조원 모험자본 증가 예상 →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

- 단기적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육성

* BDC의 신속한 시장 안착, 사모펀드 제도개선 등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 유도

4.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 부실기업의 전면적 퇴출 추진 등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

* 코스닥시장 독립성·자율성 제고,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 전환,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마련 등

-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토큰증권이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준비

* ❶ (소액공모) 現) 10억원 → 改) 30억원(예시)

❷ (플랫폼) 수요자(벤처·중소기업)-공급자(금투업계) 간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❸ (전자등록기관) 예탁결제원 외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 전문기관 허가 추진

-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

- 국민성장펀드, BDC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내 ETF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외상장 ETF와의 비대칭 규제 개선 추진 / ETF 상장·폐지요건 개선, 신상품 보호제도 검토

- “Korea Premium Weeks*” 신설, 영문공시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개선

* (Korea Premium Weeks) 자본시장 행사 집중개최 주간 신설로 정책 홍보 정례 채널 구축 (영문공시 의무법안) 現) 자산 10조원&외국인 지분율 5%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 改)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1.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할 것입니다.

-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금리대출 신설 및 기존상품 공급 확대
 -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년(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불사금예방대출 완제자 등을 위한 대출 신설
 - * (미소금융 청년상품(案)) : (금리)4.5% (한도)최대 500만원 (만기) 5년 / 5년간 1,500억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案)) : (금리)4.5% (한도)최대 500만원 (만기)5년 / 5년간 5천억원
 -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배제계층(연체자, 무소득자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
 - * (채무조정 소액대출) 공급규모 확대(年 1,200억원 → 4,200억원) 및 지원대상 확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2,000억원)) 금리부담을 15.9%→5~6%대로 완화

2.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크레딧 빌드업”)
- 불사금대출 완제시 미소금융(취약계층) 이용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완제(또는 성실상환)시 징검다리론(은행권 신용대출) 이용을 지원

<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

구분	금리인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미소금융 신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개편 징검다리론(은행)
특징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 지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지원		정책서민금융 졸업
금리	완제시 6.3%	금리 ↓	연 4.5%	제도권 금융	연 9% 內
한도	100만원	한도 ↑	500만원		3,000만원

- 은행권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상향
 - *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 ^{25년}4.0조원→^{26년}5.0조원→^{27년}5.5조원→^{28년}6.0조원
 -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 : ^{25년}30%→^{26년}32%→^{27년}34%→^{28년}35%
- 금융이력 부족계층이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숨은 신용점수 발굴 지원
 - * 공공기관 대안정보(건보료 등)를 집중·활용하는 대안정보센터 구축(신정원), 개인의 대안정보를 축적·활용하는 신용성장계좌(ABC:Account for Better Credit) 도입 등

3.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 전환, 금융회사 채권매각 규제강화 및 소멸시효 연장 억제* 등 제도 정비

* (채권매각) 원채권자에 고객 보호책임 부여, 보고·공시의무 부여
(소멸시효) 시효 도래시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연체채권은 시효완성 전제로 손비 인정

-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연체채권 캠프 일원화 관리 강화를 통해 경쟁적 추심 방지 등 연체자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

- 1회성 사면·소각에 그치지 않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 ❶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설(채무잔액 추가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❷ 신복위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現 1,500만원 이하→ 改 5,000만원 이하)
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유인체계 구축(실적공시 및 은행권 평가 반영 등)

- 재기지원 카드상품(금융권 재원) 신설 등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

* ❶ 채무조정 등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상환이력에 따라 한도상향
❷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 발급(月 300~500만원 내외 사용이 가능)

4. 세대별 든든한 자산형성, 지방까지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비과세 청년미래적금과 안정적 노후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개선 등을 통해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 제공

* (청년미래적금) 청년 납입금에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 제공 등
(주택연금개선) 초저가주택 지원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귀농·귀촌시 실거주요건 완화 등

- 지방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밀착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의 점포폐쇄 절차 강화, 은행대리업** 등 대체수단 활성화 추진

* 지자체와 협업하여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 등 확대

**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에서 예금·대출 가입 가능 → '26上 시범운영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지원도 확대

* 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25.12월) 및 보증규모 확대('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3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1. 흔들림 없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고액 주담대 자본적립 부담 강화 등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

* ① 대내·외 경제여건, 경상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②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③ 규제우회 부동산 대출 소금융권 점검 강화 및 적발시 엄정 조치(대출회수, 신규 제한 등)

-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주택 등)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금융권 상품 출시** 지원

- **부실금융회사, 부동산 PF 및 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2.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위해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을 강화하고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연장·제도화 검토

* ① 상장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② 업무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임원 중요전과(사기, 배임, 횡령 등)는 공시 의무화
③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현실화

-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확대 추진

-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

-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 공정성 제고 및 쪼개기 상장사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 강화

-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주총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책임투자문화 확산*

* (적용) 상장주식 → 주식·채권·대체투자, G(지배구조)고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이행점검) 자산운용사부터 시작 → 연기금·PEF 등으로 확대

- **일관된 회계·공시원칙** 확립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보편적인 기준·절차를 마련

3.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 빈발하는 해킹 등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규제·감독 전면 개편
 - * 해킹사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쏜업권 포괄 금융보안 법제 마련
-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 추진
 -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 불법추심 SNS연계 전화번호 차단 등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 대포통장 대응방안 마련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안착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
 - 마약, 도박 등 범죄의심계좌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초국경 범죄,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新유형범죄 대응체계 강화*
 - *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국제범죄조직 포함, AML제도 국제 정합성 제고, 트래블룰 확대 등
- ☐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를 구축해 금융소비를 철저히 보호
 - * ①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 ② 성과지표·성과보수 등 보상체계를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
 - ③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및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등 피해구제 강화

4.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홍보하겠습니다.

- ☐ 치매 관련 보험·신탁 활성화, 지자체 연계 무료 상생보험* 도입 및 사망보험 유동화 확대 등 “생활체감형 보험”을 강화
 -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신용보험, 기후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료 부담 경감과 공정한 보장을 위한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
 - * ① 중증·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5세대 실손을 출시
 - ② 舊세대(‘13년 이전) 계약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특약 등 관리방안 추진
- ☐ 마이데이터 AI Agent 도입,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AI·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 * (AI Agent) 금리인하 요구, 저금리 대환대출 조회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대신 행사 (전자금융 혁신) 전자금융업 진입부터 소비자보호·안전성확보까지 규율체계 재검토

V. 주요 입법 추진사항

	법률안명	주요내용
1	신용정보법	채무 조정기구가 금융자산 정보를 필요 최소 범위에서 정보주체 사전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자본시장법	모든 합병 등*에 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자산·영업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합병 전반 공정성 제고 권리구제 필요시 활용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결과보고서 공시도 의무화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 강화
3	자본시장법	IPO 건전성 제고를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중·장기 기관투자자 확대)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공모가 합리적 산정) 도입
4	자본시장법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전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5	자본시장법	상장회사 임원의 중요전과(사기, 배임, 횡령 등) 공시 의무화
6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CISO 권한 및 독립성 강화 등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①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②기금 손실에 대한 정부 손실 보전 근거 마련, ③법정 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 - 금융회사 상시출연 근거 마련
8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9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GP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대주주요건 도입, 금융당국 보고의무 강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사모펀드 운용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과도한 차입방지 등을 위한 정부 보고,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10	외부감사법	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 20%)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과절차 간소화 (10억 이하, 금융위 → 증선위)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25.8월 발표) 후속조치
11	예금자보호법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유동성 및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지원
12	회계기본법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보편적인 기준 절차를 마련·규율